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7의정서 제1조에 대한 해설서

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

2024년 2월 29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4.

목차

일러두기	4
서문.....	5
I. 적용 조건	7
A. 합법적으로 거주	7
B. 추방	8
II. 실체적 보호조치: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는” 추방.....	9
A. 일반 원칙	10
B. 예시	10
III. 절차적 보호조치	11
A.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12
1. 보장된 권리의 내용 및 범위	12
2. 권리 제한	13
3. 보장된 권리의 제한 검토 시 따라야 할 방법론	13
B.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5
C. 관할 당국 앞에 대리를 세움.....	16
D. 예시	17
E. 제 7 의정서 제 1 조 및 그 외 협약 조항에 따른 절차적 보호조치 간 관계	18
a. 단독으로 또는 협약 제 13 조(실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적용하는 협약 제 8 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8
b. 협약 제 13 조(실효적 구제에 대한 권리)	19
IV. 예외	19
A. 일반 원칙	19
B. 예시	20
인용 판례 목록.....	21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7의정서 제1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ó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ę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문

1. 1984년 11월 22일 채택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7의정서는 1988년 11월 1일 발효되었다¹.
2. 이 의정서는 협약 또는 이전의 의정서로는 지금까지 규정하지 않았던 권리인 외국인 추방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에 관한 권리(제1조), 유죄 판결 또는 형벌선고를 상급 법원에서 재심할 권리(제2조), 부당한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3조), 이미 최종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일사부재리”)(제4조), 배우자 간 권리 및 책임 평등 원칙(제5조)을 보장한다.
3. 제7의정서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 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

“1. 일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토에서 추방되지 아니하며, 다음이 허용되어야 한다.

- (a)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 (b)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c) 이러한 목적으로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 앞에 대리를 세울 수 있다.

2. 외국인의 추방이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 근거한 경우, 이 조 제1항 제a호, 제b호 및 제c호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추방될 수도 있다.”

4. 제7의정서 제1조에는 두 개의 항이 있다(*Nolan and K. v. Russia*, 2009, § 114).
5.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의 첫 번째 보호조치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은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될 수 없다.
6. 제1항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별 추방에 관한 절차에서 제7의정서 당사국이 확보해야 하는 보호조치를 나열한다.
 - a.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 b.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c. 이러한 목적으로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 앞에 대리를 세울 수 있다.
7. 제2항은 제1항 제a호, 제b호 및 제c호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추방될 지도 모르는 정황을 규정한다.
 -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해
 -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8.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자 조약에 따른 의무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추방을 통제할 권리는 국가에 있다. 협약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 또는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14; *Ilias and Ahmed v. Hungary* [GC], 2019, § 125 및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2012, § 77).

¹ 본 의정서는 유럽평의회 44 개 회원국이 비준하였다.

9. 제7의정서 설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제7의정서 제1조를 채택하며 추방 시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17). 이 조항으로 다른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는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통제 체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보고서 제7항 참조).

10. *Maaouia v. France* [GC], 2000, §§ 36–40 사건에서 재판소는 추방 절차 관련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제7의정서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제6조제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²]이 외국인 추방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영역에서 특별 조치를 하려 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추방에 관한 결정은 협약 제6조제1항이 의미하는 청구인의 민사적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추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11. 다만, 재판소는 강제 퇴거의 경우 제7의정서 제1조가 명시한 구체적인 보장이 제13조와 결합된 협약 제3조 및 제8조가 제공하는 보호를 보완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Lupsa v. Romania*, 2006, § 51; *Baltaji v. Bulgaria*, 2011, § 54). 협약에 따른 그 외 절차적 권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협약 제8조에 대한 해설서](#) 및 [이민에 대한 해설서](#)를 참조한다.

12.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의 맥락에서, 인권 보호 도구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협약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 요건은 이론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22; *Takus v. Greece*, 2012, § 63; 및 *Geleri v. Romania*, 2011, § 48). 이는 협약 및 그 의정서의 모든 조약을 해석하는 일반 원칙이 된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22).

2 제 6 조제 1 항의 범위는 재판소 웹사이트인 [ECHR-KS](#) 에서 제공하는 제 6 조에 대한 해설서([형사 영역](#) 및 [민사 영역](#))를 참조한다.

I. 적용 조건

협약 제7의정서 제1조

“1. 일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

HUDOC 주제어

합법적으로 거주(P7-1-1) – 외국인 추방(P7-1-1)

A. 합법적으로 거주

13. 제7의정서 제1조는 당사국 영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맥락일 때만 적용한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91; *Georgia v. Russia (I)* [GC], 2014, § 228, 및 *Sejdovic and Sulejmanovic v. Italy* (dec.), 2002).

14. 제7의정서 제1조는 개인에게만 적용하며, 예를 들어 국제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O.I.J. v. the Czech Republic* (dec.), 1999; 및 *F.S.M. v. the Czech Republic* (dec.), 1999).

15. “거주”라는 관념에 대해 설명보고서는 “거주라는 단어는 항구 또는 그 외 입국 지점에 도착하였지만, 아직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오로지 경유 목적으로만 또는 비거주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영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이 조의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거주 허가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한다”(설명보고서 제9항 참조).

16. 재판소는 설명보고서에 제시된 거주자라는 단어의 정의를 확인하였다(*Yildirim v. Romania* (dec.), 2007; *S.C. v. Romania*, 2015, § 83).

17. 재판소는 *Nolan and K. v. Russia*, 2009 사건에서 “거주”라는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첫째, 주어진 국가에서의 “거주”라는 관념이 해당 국가의 영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둘째, “거주자”라는 단어가 영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거나 비거주 목적으로만 허락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거주”라는 관념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장소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연결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약 제8조에서 작성된 “주거”라는 독자적 개념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³. 따라서 어느 국가에 거주 목적으로 허가받고 들어와 정착한 외국인이라면 해외로 나갈 때마다 “거주자”가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ibid.*, § 110).

18. 설명보고서는 “합법적으로”의 의미에 대해 “합법적으로라는 단어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가리킨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영내에 존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국내법이 결정한다.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3. “주거”라는 관념은 다음을 참조한다. *Prokopovitch v. Russia*, no. 58255/00, § 36, ECHR 2004-XI(발체): “재판소는 제 8 조가 의미하는 “주거”라는 개념은 합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합법적으로 확립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협약 기구의 판례를 소환한다. “주거”는 국내법에 따른 분류에 의거하지 않는 독자적 개념이다. 살고 있는 곳이 제 8 조제 1 항이 보호하는 “주거”에 해당하려면 사실 상황, 즉 구체적인 장소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연결점이 존재해야 한다(다음 판례 참조: *Buckley v. the United Kingdom*, 1996 년 9 월 25 일 판결, 판결 및 결정 보고서 1996-IV, §§ 52-54, 및 1995 년 1 월 11 일 위원회 보고서, § 63; *Gillow v. the United Kingdom*, 1986 년 11 월 24 일 판결, Series A no. 109, § 46; *Wiggins v. the United Kingdom*, no. 7456/76, 1978 년 2 월 8 일 위원회 결정, 결정 및 보고서(DR) 13, p. 40.”

불법으로 입국하였다가 이후 지위가 정상화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입국 및 체류가 정해진 기간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더 이상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설명보고서 제9항 참조).

19. 재판소는 판례에서 “거주가 합법적이려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Yildirim v. Romania* (dec.), 2007; 또한 *Sultani v. France*, 2007, § 88; 및 *Bolat v. Russia*, 2006, § 76 참조). 따라서 한 사람의 영내 존재를 “합법적”으로 보려면 지켜야 하는 조건은 국내법으로 결정한다(*Sharma v. Latvia*, 2016, § 73).

20. 재판소는 유효한 거주 허가증이 없는 경우(*Sejdovic and Sulejmanovic v. Italy* (dec.), 2002 및 *Sulejmanovic and Sultanovic v. Italy* (dec.), 2002), 정치적 망명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S.T. v. France*, 위원회 결정, 1993) 또는 임시 비자가 만료된 후 거주 허가 또는 난민 신분을 얻기 위해 제기한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거나(*Voulofovitch and Oulianova v. Sweden*, 위원회 결정, 1993) 비호 신청 심리를 기다리며(*S.C. v. Romania*, 2015, § 84–85 및 *N.M. v. Romania*, 2015, § 104–105) 해당 국가에 머무른 경우 그 외국인은 국가의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특정 날짜까지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조치하지 않은 외국인(*Yildirim v. Romania* (dec.), 2007) 및 거주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이 추방 명령에도 불법으로 재입국한 경우(*Karimi v. Romania* (dec.), 2020, § 57)도 마찬가지였다.

21. 나아가 거주 허가증을 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은 통상적으로 제7의정서 제1조에 의거할 수 없다(*A.M. and Others v. Sweden* (dec.), 2009). 마지막으로, 위조된 사증으로 무단 입국한 외국인은 합법적인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T.A. v. Sweden*, 위원회 결정, 1994).

22. 다만 추방 당시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Nowak v. Ukraine*, 2011, § 80) 및 국내법에 따른 비호신청자로 피청구국 영토 내에 체류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Ahmed v. Romania*, 2010, § 46)은 합법적인 거주자이다. 관할 국가 당국이 청구인의 거주 허가를 무효로 했다고 하여도 추방 당시 계류 중이던 합법성 심사로 인해 해당 결정의 이행을 법원이 중지한 경우라면 청구인이 더 이상 “합법적 거주자”가 아님을 뜻하지 않는다(*Bolat v. Russia*, 2006, § 78).

23. 합법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7의정서 제1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재판소는 제35조제3항이 의미하는 협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는 물적 관할로 제소 사건을 각하한다(*Sulejmanovic and Sultanovic v. Italy* (dec.), 2002; *Yildirim v. Romania* (dec.), 2007; *S.C. v. Romania*, 2015, § 86).

B. 추방

24.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당사국은 영내에 존재하는 외국인의 추방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지만, 이 권한은 해당인의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Bolat v. Russia*, 2006, § 81 및 *Nowak v. Ukraine*, 2011, § 81).

25. 유럽인권재판소는 “추방”이라는 개념이 “국내법이 말하는 정의와는 별개인 독자적 개념”이며 “범죄인 인도를 제외하고, 영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외국인의 출국을 강제하는 모든 조치는 제7의정서 제1조의 목적에 따른 ‘추방’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강조하였다(*Bolat v. Russia*, 2006, § 79; *Nolan and K. v. Russia*, 2009, § 112; 설명보고서 제10항 참조).

26.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을 주거에서 퇴거 조치하여 타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태우는 행위를 추방으로 규정하였다(*Bolat v. Russia*, 2006, § 79).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다시 해외로 나갔을 때 피청구국에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여 영구 출국을 강제하는 결정은 추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Nolan and K. v. Russia*, 2009, § 112).

27. 다만, *Yildirim v. Romania* (dec.),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루마니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아니라 입국권이 거부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Davies and Others v. Romania* (dec.), 200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첫 번째 청구인이 추방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이유로 입국 및 체류 허가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였다. 재판소는 추방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른 제소가 양립할 수 없는 물적 관할이라고 판단하였다.

28. 추방 명령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제7의정서 제1조를 적용하는가? 재판소는 *Ljatić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21–23 사건에서 이 질문에 답하였다. 청구인은 세르비아 국적으로 8세부터 피청구국에 살았고, 내무부가 청구인의 비호권을 종료한 당시 2014년까지 갱신된 거주 허가증이 있는 상태였다. 이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16년 4월 1일 마케도니아 공화국(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절차가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청구인은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였다.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였다⁴.

29. 실제로 추방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7의정서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재판소는 문제의 결정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결과, 즉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법적 근거를 종료하는 효과가 낳고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떠나도록 강제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심리하였다(*ibid.*, § 22). 나아가 재판소는 해당 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았으며 국내 당국이 이행을 중단하거나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aeed v. Denmark* (dec.), 2014, § 7 대조). 또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식적인 요건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언제라도 추방될 위험이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일회성으로 피청구국에서 출국 및 귀국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출국을 강제하는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강제 퇴거로 이어질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었다. 게다가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계속 체류한 것은 그저 국가 당국의 재량으로 용인되었을 뿐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Ljatić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22).

30.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피청구국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내무부의 결정은 순전히 실질적인 목적에서 청구인을 향한 추방 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며, 제7의정서 제1조가 관여한다고 판단하였다(§ 23).

II. 실제적 보호조치: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는” 추방

제7의정서 제1조제1항

“일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토에서 추방되지 아니하며...”

4. 유럽인권재판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주체이다(*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no. 37685/10, § 126, 2018 년 3 월 20 일; *Söderman v. Sweden* [GC], no. 5786/08, § 57, ECHR 2013 및 *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no. 16318/07, § 27, 2010 년 4 월 27 일 참조).

HUDOC 주제어

법에 따라(P7-1-1) – 접근성(P7-1-1) – 예측가능성(P7-1-1) – 남용 방지 보호조치(P7-1-1)

A. 일반 원칙

31.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의 첫 번째 근본적인 보호조치는 외국인이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18). 이 관념은 협약 및 그 의정서에서 모두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ibid.*).

32. 여기서 “법”이라는 용어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관할 당국은 실체법 조항과 유관 절차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Bolat v. Russia*, 2006, § 81).

33. 그렇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용어는 국내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질(quality of law), 즉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면서도 공권력의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협약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18; *Baltaji v. Bulgaria*, 2011, § 55; *Ahmed v. Romania*, 2010, § 52; *Kaya v. Romania*, 2006, § 55; *Lupsa v. Romania*, 2006, § 55). 제7의정서 제1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는 협약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는 협약 전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법의 지배가 협약의 모든 조항에 내재되어 있다는 판례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18). 즉, 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실행하여 추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이 협약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7의정서 제1조를 위반하게 된다.

34.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Sharma v. Latvia*, 2016, § 80 및 *Bolat v. Russia*, 2006, § 81).

35.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추방의 맥락이라면 이 분야의 특수성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거나 사전에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관찰한 결과(*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40 준용하여 참조), 예측가능성 요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릴 모든 행위가 자세히 나열된 법률 조항을 제정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Ljatić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35).

B. 예시

36. *Bolat v. Russia*,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추방을 명령하는 사법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결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내법은 결정이 있어야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81-82).

37. *Sheveli and Shengelaya v. Azerbaijan*,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부가 집행 가능한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추방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5-46).

38. 라트비아에서 인도 국적자가 추방된 *Sharma v. Latvia*, 2016 사건에서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행정 행위는 상대방에게 통지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행정 행위의 긴급 집행 조건이 특별법 또는 다툼이 있는 결정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상급인 기관에 항소하면 해당 행위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최초의 추방 명령은 2005년 6월 13일 채택되었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청구인은 상급 기관에 항소하여 항소 결과인 결정의 효력 발생일까지 최초 추방 명령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었다. 이 사건에서 라트비아 당국은 청구인의 항소가 있을 때까지 긴급 추방 집행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항소는 2005년 7월 11일 결정되었고, 결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결정은 2005년 7월 12일 청구인이 추방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국내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39. *Ahmed v. Romania*, 2010, § 53-55 사건에서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루마니아 법은 당국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고, 루마니아 법이 청구인들에게 피소된 행위에 대해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고 검찰이 적시에 이들에 대한 명령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같은 취지의 *Kaya v. Romania*, 2006, § 57 및 *Lupsa v. Romania*, 2006, § 57 참조).

40. *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73 사건에 첫 번째 청구인의 추방이 협약 제8조제2항이 의미하는 “법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나서 이 표현이 협약과 그 의정서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라는 점을 확인한 후⁵ 재판소는 추방이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른 합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이와 관련하여 *Lupsa v. Romania*, 2006, § 57, *Baltaji v. Bulgaria*, 2011, § 56, *Geleri v. Romania*, 2011, § 45 참조).

41. 사건에 따라 재판소는 국내법의 질뿐만 아니라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에 열거된 보호조치의 준수 여부도 심리하였다(예를 들어 *Lupsa v. Romania*, 2006, §§ 58-60, *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74, *Geleri v. Romania*, 2011, §§ 46-47 참조).

42. *Corley and Others v. Russia*, 2021, §§ 53-64 사건은 주로 청구인들이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강제 출국”한 것과 관련된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추방에 앞서 청구인들이 법에 따라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당국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점과 청구인 중 한 명에게 석방을 대가로 무효인 항소권 포기서에 서명하게 한 점을 고려하였다(*ibid.*, § 63).

III. 절차적 보호조치

제7의정서 제1조제1항

“1. 외국인은 ... 다음이 허용되어야 한다.

(a)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b)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c) 이러한 목적으로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 앞에 대리를 세울 수 있다.”

⁵ 재판소는 “법에 따라”(제 8 조), “법에 규정된”(제 9 조부터 제 11 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제 1 의정서 제 1 조), “법에 따라”(제 7 의정서 제 1 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Malone v. the United Kingdom*, 1984 년 8 월 2 일, § 66, Series A no. 82 참조. 또한 *Mihalache v. Romania* [GC], no. 54012/10, § 112, 2019 년 7 월 8 일 참조).

HUDOC 주제어

추방에 이의 제기(P7-1-1) 추방 결정 심사(P7-1-1) 관할 당국(P7-1-1) 대리됨(P7-1-1)

43. 합법성 조건 외에도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은 구체적인 절차적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 b.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c. 이러한 목적으로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 앞에 대리를 세울 수 있다.

44. 재판소는 다루게 된 사건에서 이러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조에 나열된 보호조치 중 하나만을 살핀다거나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대신 다양한 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다만, 재판소 판례법에 언급된 요인 중 몇 가지 요소를 통해 이러한 권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A.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1. 보장된 권리의 내용 및 범위

45.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 제a호 및 제b호에 나열된 절차적 보호조치를 함께 심리하기도 하였다.

46. *Lupsa v. Romania*, 2006 및 *Kaya v. Romania*, 2006 사건에서 제a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첫째, 당국이 청구인들에게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둘째, 검찰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유일한 심리 기일 전까지 그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모든 연기 요청을 각하하여 청구인들의 변호사가 명령을 연구하고 사법 심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였다(*Lupsa v. Romania*, 2006, § 59 및 *Kaya v. Romania*, 2006, § 59). 마지막으로,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모든 조항은 이론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순전히 형식적인 심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강제 퇴거에 대한 반론을 고려하며 사건이 심리되게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Lupsa v. Romania*, 2006, § 60, *Kaya v. Romania*, 2006, § 60 및 *Geleri v. Romania*, 2011, § 48).

47. 재판소는 행정법원 같은 관할 당국이 추방에 대해 외국인이 제기한 항소의 본안 심리를 거부한 경우, 그 외국인은 “추방에 반론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Baltaji v. Bulgaria*, 2011, § 57). 또한 재판소는 특히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추방의 실제 사유에 접근할 수 없었고 추방 명령을 내린 기관의 제도적 상급 기관인 장관은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 당국에 항소라는 기존의 수단은 실효적 구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이유로, 재판소는 이 항소가 순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추방에 대한 반론에 비추어 적절하게 사건이 심리되게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ibid.*, § 58).

48. 그러므로 판례를 살펴본 재판소의 판단은 언제나 제7의정서 제1조 하에 해당 외국인은 기소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고(*Lupsa v. Romania*, 2006, § 59) 청구인들에게 추방 사유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항상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Lupsa v. Romania*, 2006, §§ 40 및 56 ; *Kaushal and Others v. Bulgaria*, 2010, §§ 30 및 48; *Baltaji*

v. Bulgaria, 2011, § 58 및 *Ljlatif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36–39).

49.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방된 외국인이 추방의 실제 사유를 알 권리와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된 파일 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의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제7의정서 제1조 본문에 이러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후 실효성 원칙을 염두에 둔 재판소는 이전 판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은 당국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이에 유의미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국내 당국이 믿게 된 유관 사실 요소를 모르는 채로는 추방에 대한 반론을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26). 재판소는 파일 내 문서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라 “외국인의 추방을 결정하는 관할 국가 기관이 의거하는 문서의 내용과 정보에 대해 가급적 서면으로 및 어떤 경우에도 ...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에 정당한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고 통보받을 권리가 외국인에게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28).

50. 따라서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은 추방 사유를 알 권리 및 추방 절차의 배경이 되는 파일 내 문서 접근권을 해당 외국인에게 보장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되며, 즉 해당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관할 국내 당국이 판단하게 한 유관 사실 요소를 알 권리와 더불어 추방 결정 근거로 당국이 의거한 사건 파일에 담긴 문서의 내용 및 정보에 접근할 권리로 제한된다.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29; 예를 들어 범죄 혐의로 소추된 사람이 기소 사실을 알 권리와 사건 파일에 있는 모든 문서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6조의 요건을 비교.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6조에 대한 해설서\(형사 영역\)](#) 참조.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경우 실효적 구제를 보장한다고 해서 해당인에게 기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 협약 제8조 요건과 비교. *S.L. v. Romania* (dec.), 2022, §§ 42–43)).

2. 권리 제한

51.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가 보장하는 권리는 절대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30). 하지만 해당 권리의 제한이 이 조항에 명시된 보호조치의 본질을 훼손하여 제7의정서 제1조에서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가 무효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제한 사항이 있다 해도 외국인에게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수 있는 실효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의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ibid.*, § 133).

3. 보장된 권리의 제한 검토 시 따라야 할 방법론

52.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와 양립하는 유관 권리에 제한을 가하였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2단계 심사를 마련하였다. 먼저 관할 독립 기관이 해당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비추어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상쇄 요소로 충분히 상쇄되었는지 심리한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33 및 137).

53. 국가 당국이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을 심리하지 않았거나 심리가 불충분하여 정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재판소는 상쇄 수단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한다(*ibid.*, § 144).

다만 재판소의 조사 강도가 다르며, 국가 당국의 심리가 엄격하지 않은 만큼 상쇄 요소에 대한 재판소의 조사는 엄격해진다(*ibid.*, § 145).

54. 재판소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심사 과정을 인도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두 가지로 첫째,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할수록 절차적 권리 제한을 상쇄하기 위해 보호조치가 중요해지며 둘째, 사건의 정황이 외국인의 상황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쇄 목적의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ibid.*, § 146).

55. 재판소는 소송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어진 사건의 정황에 맞게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ibid.*, §§ 138 및 157), 이는 소송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56. 재판소는 심사의 첫 단계에서 논란이 된 제한이 “충분히 정당한 이유”로 부과되었는지에 대한 국내 당국의 평가가 지켜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예를 들어 *Ibrahim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265 및 *Beuze v. Belgium* [GC], § 142에서 요구한 “중대한 이유” 및 *Schatschaschwili v. Germany* [GC], § 107에서 요구한 “상당한 이유”와 비교). 재판소는 국가 안보를 지킬 필요성 같은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국가 당국이 평가할 문제임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에 제한이 부과된 의사 결정 절차를 심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균형을 잡기 위해 고려할 만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명시하였다(*ibid.*, §§ 139–142)

- 제한을 부과하려는 집행 기구로부터 독립한 사법부 또는 그 외 당국의 조사
- 해당 국가 당국의 권한 범위 및 특히 다음 사항
 - 해당 당국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가
 - 절차적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주어진 사건에서 독립 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라 독립 기관에 부여된 권한

57. 심사의 두 번째 단계인 상쇄 요소에 대해 재판소가 제시한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ibid.*, § 151–156), 일부 요소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 제b호 및 제c호의 영향을 받았다.

- 추방 결정의 배경이 되는 사실 요소 및 당국이 그 결정을 내릴 때 의거한 문서와 정보의 내용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실제로 공개된 정보의 관련성(이때 외국인은 소송 과정에서 기소의 실체를 알아야 하며, 분류된 증거를 모두 심리한 후 해당 외국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 기관이라는 점에 유의한다)(*ibid.*, §§ 151–152). 법률 조항의 번호를 그저 나열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기소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없다(*ibid.*, § 168).
- 외국인에게 소송 진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외국인의 권리 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국내 보호조치. 재판소는 특히 외국인을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거나 국내 절차 규칙에 따라 사건 심리에 신속성이 부과되는 경우, 적어도 소송의 주요 단계에서는 국내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ibid.*, § 153).
- 소송에서 외국인 대리 여부. 제1조제1항제c호의 보호조치 외에도, 변호사 또는 심지어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사건 파일 내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외국인을 대리할 가능성도 중요한 상쇄 요소에 해당하며, 대리인이 기밀 자료에 접근한 후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ibid.*, §§ 154–155).
- 소송에서 독립 기관의 개입⁶

⁶ 이 요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해설서 제 63 항 참조.

58. *Hassine v. Romania*, 2021, §§ 51–54 사건에서 재판소는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사건에서 제시된 원칙의 대략을 밝혔다. 이어서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사건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그 원칙을 적용하여 제7의정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B.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59. 제7의정서 제1조제b호에 규정된 권리(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추방 결정을 순전히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Kaushal and Others v. Bulgaria*, 2010, § 4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첫 번째 청구인을 추방 결정한 토대가 된 혐의를 확인하거나 해소할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이 결정을 순전히 형식적으로 심리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자신의 추방에 대한 반론에 비추어 사건을 진정으로 심리 및 심사하게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국내 법원의 조치는 제7의정서 제1항제b호를 위반한다.

60. 추방 결정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재판소가 *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74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추방을 결정한 토대가 된 혐의를 확인하거나 해소할 증거 수집을 거부하고 이 결정을 순전히 형식적 심리에 맡긴 결과 청구인은 자신의 추방에 대한 반론에 비추어 사건을 진정으로 심리 및 심사하게 할 수 없었기에 제1항제b호에 어긋난다고 보았을 때도 문제가 되었다.

61. *Ljatif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35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안보가 달린 사건에서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 및 제b호의 절차적 보호조치를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 추방 결정은 청구인 또는 해당 조치를 심리한 국내 법원에 어떠한 실제 사유도 공개되지 않은 채 청구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재판소는 절차적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의 맥락에서 적용되는 법의 예측가능성 요건 및 법의 지배 개념에 근거하여, 강제 퇴거 조치가 기밀 정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적 제한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독립 기관 또는 법원에서 어떤 형태이건 대심 절차의 대상이 되기를 요구하였다. 독립 기관 또는 법원은 “국가 안보”의 발동이 사실 관계 내에서 합당한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사건이라면 대응할 수 있어야 했다.

62. 본문의 이 부분은 추방 결정의 배경이 되는 사유가 독립 행정 또는 사법 등 독립 기관에서 검토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결정의 본안 심사 관할 기관이어야 함을 명시한다. 외국인의 권리는 추방 정당화 증거로 사용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여도 외국인은 이 기관 앞에서 국가 안보가 위협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는 그 사건에서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 및 제b호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63.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56 사건에서 재판소는 독립 기관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도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가 보장하는 권리의 제한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b호가 보장하는 권리 및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이전 사건에서 이미 고려한 측면을 통합하고 몇 가지 다른 측면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재판소는 다음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i) 하나 이상의 독립 기관(행정 또는 사법 기관)이 추방 조치를 직접 채택하거나 그 적법성 또는 심지어 본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송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그 외 여러 기관 중 위에서 인용한 *A/-Nashif*, § 137, 위에서 인용한 *Lupsa*, § 56 및 위에서 인용한 *Ljatif*, § 32 참조) 및 그 기관이 법원이라면 국가 법 체계의 계층 구조에서 그 위치 문제. 이와 관련하여 추방 조치를 사법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 형태의 조사보다 더 큰 상쇄 효과가 있다.

(ii) 청구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기된 주장에 대해 독립 기관에서 실효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위에서 인용한 *Ljatifi*, § 35 참조).

(iii) 독립 기관이 사건에 따른 추방 청구 또는 결정의 배경이 되는 증거와 인용된 보조 증거를 실효적으로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만일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였는지 여부(위에서 인용한 *C.G. and Others*, §§ 73 및 74; 위에서 인용한 *Geleri*, § 48; 및 위에서 인용한 *Ljatifi*, § 35 참조). 이 점에 대해 재판소는 독립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관련 국가 안보 기구가 외국인에게 사건을 제기하기 위해 구성한 파일 전체(기밀 문서 포함)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위에서 인용한 *Ljatifi*, § 32 참조).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그 기관이 파일에 포함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사건에 따른 추방 청구 또는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기밀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일 수 있다(위에서 인용한 *C.G. and Others*, §§ 73-74, 위에서 인용한 *Kaushal and Others* § 49 및 *Regner*, § 152를 준용하여 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할 국가 안보 기구가 발동한 국가 안보 근거가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추정은 없으며, 독립 기관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위에서 인용한 *Kaushal and Others*, §§ 31-32 및 49 참조).

(iv) 추방 결정 심사가 요청된 독립 기관이 해당 파일에 비추어 국가 안보 발동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v) 사건의 정황과 독립 기관이 제공한 논리에 비추어 추방의 필요성이 그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그럴듯한지 여부. 이 맥락에서 재판소는 해당 외국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당국이 적용한 조사의 성격과 정도가 결정의 이유에서 적어도 약식으로라도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C. 관할 당국 앞에 대리를 세움

64. 설명보고서에 따르면, 제1조제1항제c호는 관할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대리가 사건을 진술하게 하는 권리가 해당 외국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고서에는 그러한 대리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관할 당국”은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또한, 이와 관련하여 *Ljatif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35 참조). 또한 사건을 심사하는 “관할 당국”이 추방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제b호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 당국에 추방을 권고하는 절차로 충족된다(설명보고서 제13.3항 참조).

65. 재판소가 이미 심리를 마친 사건에서 “관할 당국”은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이었다(비사법 기관 예시: *Sharma v. Latvia*, 2016 및 *Baltaji v. Bulgaria*, 2011). 다만 재판소는 제도적으로 상급인 당국, 즉 피청구국 내무부 장관에게 항소한 경우, 청구인이 “절차의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의 추방에 대한 실제 사유를 인지할 수 없었고”, “논란이 된 명령을 내린 당국에 대해 제도적으로 상급 당국인 장관은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기구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실효적인 국내 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altaji v. Bulgaria*, 2011, § 58).

66.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54-155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c호를 언급하며 외국인들은 추방 결정에 대해 관할 당국 앞에 대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법 조항은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대리를 세울 실효적인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Poklykayew v. Poland** (2023, §§ 75 및 76) 사건에서 청구인의 문서 접근권 제한을 상쇄하는 요소로 청구인의 소송 대리 가능성을 심리한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기밀 정보 취급 인가를 받은 변호사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D. 예시

67. *Nolan and K. v. Russia*, 2009, § 115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의 추방 결정이 3개월 이상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 또는 청구인이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의 입회 하에 사건의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7의정서 제1조에 명시된 절차적 보호조치를 누릴 수 없었다.

68. *Nowak v. Ukraine*, 2011, § 8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추방 결정이 출국일에 청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청구인이 대리를 세우거나 추방에 반론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7의정서 제1조를 위반하였다.

69. 다만, *Mokrani v. France* (dec.), 2002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정 소송의 맥락에서 강제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강제 퇴거 위원회 앞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제a호, 제b호 및 제c호에 명시된 모든 보호조치를 누렸다고 판단하였다.

70. 마찬가지로 *Dorochenko v. Estonia* (dec.),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건이 행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 항소 후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모든 단계에서 당국의 체류 허가 연장 거절에 반론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 청구인은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에 규정된 모든 보호조치를 누렸다(또한, 같은 취지인 *Nagula v. Estonia* (dec.), 2005 및 *Unlu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96 참조).

71.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두 명의 파키스탄 국민으로 루마니아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어 15년간 입국이 금지된 후 테러 활동을 의심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강제 퇴거 되었으나 구체적인 기소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고 “기밀”로 분류된 파일 내 문서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루마니아 법원은 루마니아 정보기관이 작성한 파일 내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문제의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는 변호사 2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절차는 시한도 매우 촉박하였다(해당 항소의 경우 5일).

72. 재판소는 추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사실 요소 및 유관 문서 내용을 청구인들이 알 권리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독립 국가 기관은 이러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하거나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상쇄 요소를 엄격히 조사해야 했다. 청구인들은 그들의 기소가 어떤 법적 성격을 띠는지 대단히 일반적인 정보만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소송 절차의 주요 단계에 대한 정보나 관련 인증서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파일에 있는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 루마니아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상급 사법 당국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절차적 권리 행사에서 겪은 제한을 상쇄할 만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전체 절차 및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국가가 누리는 인정 범위를 고려한 후, 국내 절차에서 제한을 상쇄하여 이러한 권리의 본질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7의정서 제1조를 위반하였다.

73. *F.S. v. Croatia**(2023, §§ 64, 68 및 7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지적한 후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사실 요소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다(청구인들이 적어도 테러와 관계된 문제라는 것은 알았던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12 및 161 사건 및 청구인이 폴란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정에서 그가 벨라루스 정보기관과 협력한 점이 언급된 *Poklykayew v. Poland*, 2023, §§ 6 및 66 사건과 다르다). 국내 법원은 상쇄 요소를 심리하면서 청구인의 추방 관련 사법 심사 절차에 대한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또한 국내 법원이 청구인에게 추방에 반론을 제출할 실효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가용한 절차적 기제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상쇄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쇄하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현저히 제한한 것은 제7의정서 제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E. 제7의정서 제1조 및 그 외 협약 조항에 따른 절차적 보호조치 간 관계

74.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른 절차적 보호조치는 그 성격상 다른 협약 조항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한다. 즉, 절차적 보호조치 관련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은 때때로 둘 이상의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청구 심리의 기준이 될 조항을 표시한다. 동일한 절차적 결함에 대한 제소 사건이 둘 이상의 조항에 의거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마다 특징적인 정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조항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Hassine v. Romania*, 2021, § 74 참조). 다만, 기준이 되는 조항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여러 조항에 따라 심리할 수도 있다.

75. 동일한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해 제소할 때 주로 의거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a. 단독으로 또는 협약 제13조(실효적 구제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적용하는 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76. 청구인들이 거주 국가에서 퇴거된 절차에서 절차적 보호조치의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제소할 때는 협약 제8조에 단독 의거하기도 하고(*Baltaji v. Bulgaria*, 2011, § 20 및 *Lupsa v. Romania*, 2006, § 19) 협약 제13조와 더불어 의거하기도 한다(*Kaushal and Others v. Bulgaria*, 2010, §§ 18 및 35). 이런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8조에 따라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에 대한 침해가 품질 조건을 충족하는 법에 근거한 것인지(*Lupsa v. Romania*, 2006, § 42 및 *Kaushal and Others v. Bulgaria*, 2010, §33, *Baltaji v. Bulgaria*, 2011, § 38) 또는 민주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Gaspar v. Russia*, 2018, § 43 및 *Liu v. Russia (no. 2)*, 2011, § 85)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소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소는 또한 국내 법원이 문제의 조치에 비례성 심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협약 제13조 위반을 인정하였다(*Kaushal and Others v. Bulgaria*, 2010, § 41). 이어서 재판소는 제7의정서 제1조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심리하였다.

77.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의 제한을 심리할 때 재판소가 사용한 방법론을 최근 유사한 사건이 협약 제8조를 단독으로 또는 제13조와 결합하여 제기되자 사용한 방법론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제8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재입국 금지 사유를 알지 못했다고 제소하자 재판소는 이를 충분한 절차적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협약 제8조에 따라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성과 어떤 형태든 대심 절차를 보장할 필요성 간 균형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황에서 협약 제8조가 요구하는 절차적 보호조치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국이 마련한 절차적 제도 전체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S.L. v. Romania* (dec.), 2022, §§ 42–43 및 *I.R. and G.T. v. the United Kingdom* (dec.), 2014, §§ 59–60 및 *Saeed v. Denmark* (dec.), 2014, § 35).

78. 재판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추방에 관한 사건에서 제13조에 포함된 실효적 구제의 보장에 따르면 최소한 관할 독립 항소 기관은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된 사유를 알아야 하지만, 해당 개인도 그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I.R. and G.T. v. the United Kingdom*, 2014, § 62). 재판소는 나아가 항소 기관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밀 정보 취급 인가 후 특별 대리를 통해 어떤 형태이든 대심 절차가 있어야 하며, 해당 조치가 가족생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라면 관련된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Al-Nashif v. Bulgaria*, 2002, § 137 및 *I.R. and G.T. v. the United Kingdom*, 2014, § 62).

b. 협약 제13조(실효적 구제에 대한 권리)

79. *Takush v. Greece* (2012, § 49–50) 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추방되어 퇴거 결정에 대한 구제가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오직 협약 제13조에만 의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80. *Berdzeni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 124 및 129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7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협약 제13조에 의거하여 퇴거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는 실효적 구제가 없다고 호소하였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했다고 증명하지 못한 청구인들도 있었고 추방되지 않은 청구인들도 있었다는 이유로 제7의정서 제1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청구를 협약 제13조에 따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1. 청구인들이 제7의정서 제1조 외에도 협약 제13조에 의거하여 퇴거에 이르는 절차에서 적절한 절차적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제소한 사건도 있었다. 재판소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Ljatif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45 사건에서 재판소가 취한 견해에 따르면, 국내 법원은 논란이 된 명령을 내린 이유가 진정으로 국가 안보상의 이유였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제7의정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협약 제13조 위반인지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 더 최근에는,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입장을 취한(*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13–115 및 126) 재판소는 협약 제7의정서 제1조에만 의거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2020, § 88 및 *Poklykayew v. Poland**, 2023, § 42–43).

IV. 예외

제7의정서 제1조제2항

“외국인의 추방이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 근거한 경우, 이 조 제1항 제a호, 제b호 및 제c호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추방될 수도 있다.”

HUDOC 주제어

절차적 권리 행사 전 추방(P7-1-2) 민주 사회에 필요(P7-1-2) 공공질서 보호(P7-1-2) 국가 안보(P7-1-2)

A. 일반 원칙

82. 일반적인 규칙으로 외국인은 퇴거되기 전에 제1항 제a호, 제b호 및 제c호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항은 이러한 권리가 행사되기 전에 추방하는 것이 공공질서의 이익이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한다(설명보고서 제15항 참조; *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77–78 및 *Takush v. Greece*, 2012, § 63).

83. 이러한 예외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정의한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설명보고서 제15항 참조 및 *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77).

84. 외국인이 제1조제1항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공공질서에 의거하여 추방하는 국가는 이러한 예외 조치가 특정한 사건 또는 특정 범주의 사건들에 필요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추방이 결정되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설명보고서 제15항 참조).

85. 다만, 두 경우 모두 해당인은 추방된 후에도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설명보고서 제15항 참조, *Lupsa v. Romania*, 2006, § 53 및 *Kaya v. Romania*, 2006, § 53).

B. 예시

86. 그러므로 *Nolan and K. v. Russia*, 2009, § 115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이익이 위태롭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2항에 명시된 예외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적 보호조치를 누렸어야 한다.

87. *C.G. and Others v. Bulgaria*, 2008, § 78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재판소가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파일을 살펴봐도 첫 번째 청구인이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실제로 추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나아가 재판소는 청구인의 추방이 협약 제8조제2항이 의미하는 “순전히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제7의정서 제1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의 측면에서도 용어의 유사성에 비추어 추방의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ibid.*, § 77).

88. 이에 더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논거도 없이 그저 청구인이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7의정서 제1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Takush v. Greece*, 2012, § 63).

89. 추방 명령의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평가의 배경이 되는 사실도 표시하지 않은 채 추가 설명도 없이 관할 심사 당국이 받아들인, 해당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진술은 제7의정서 제1조가 보장하는 절차적 보호조치를 미처 행사하기도 전에 추방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Ljatif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36–38).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44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어지는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A.M. and Others v. Sweden (dec.), no. 38813/08, 16 June 2009

Ahmed v. Romania, no. 34621/03, 13 July 2010

Al-Nashif v. Bulgaria, no. 50963/99, 20 June 2002

—B—

Baltaji v. Bulgaria, no. 12919/04, 12 July 2011

Berdzenishvili and Others v. Russia, no. 14594/07 and 6 others, 20 December 2016

Bolat v. Russia, no. 14139/03, ECHR 2006–XI (extracts)

—C—

C.G. and Others v. Bulgaria, no. 1365/07, 24 April 2008

Corley and Others v. Russia, nos. 292/06 and 43490/06, 23 November 2021

—D—

Davies and Others v. Romania (dec.), no. 40122/98, 7 January 2003
De Souza Ribeiro v. France [GC], no. 22689/07, ECHR 2012
Dorochenko v. Estonia (dec.), no. 10507/03, 5 January 2006

—F—

F.S. v. Croatia,* no. 8857/16, 5 December 2023
F.S.M.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9803/98, 27 April 1999

—G—

Gaspar v. Russia, no. 23038/15, 12 June 2018
Geleri v. Romania, no. 33118/05, 15 February 2011
Georgia v. Russia (I) [GC], no. 13255/07, ECHR 2014 (extracts)

—H—

Hassine v. Romania, no. 36328/13, 9 March 2021

—I—

I.R. and G.T.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14876/12 and 63339/12, 28 January 2014
Ilias and Ahmed v. Hungary [GC], no. 47287/15, 21 November 2019

—K—

Karimi v. Romania (dec.), no. 30186/19, 23 June 2020
Kaya v. Romania, no. 33970/05, 12 October 2006
Kaushal and Others v. Bulgaria, no. 1537/08, 2 September 2010

—L—

Liu v. Russia (no. 2), no 29157/09, 26 July 2011
Ljatif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19017/16, 17 May 2018
Lupsa v. Romania, no. 10337/04, ECHR 2006–VII

—M—

Maaouia v. France [GC], no. 39652/98, ECHR 2000–X
Malone v. the United Kingdom, 2 August 1984, Series A no. 82
Mihalache v. Romania [GC], no. 54012/10, 8 July 2019

Mokrani v. France (dec.), no. 52206/99, 12 November 2002
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no. 16318/07, 27 April 2010
Muhammad and Muhammad v. Romania [GC], no. 80982/12, 15 October 2020

—N—

N.M. v. Romania, no. 75325/11, 10 February 2015
Nagula v. Estonia (dec.), no. 39203/02, 25 October 2005
Nolan and K. v. Russia, no. 2512/04, 12 February 2009
Nowak v. Ukraine, no. 60846/10, 31 May 2011

—O—

O.I.J. v. the Czech Republic (dec.), no. 41080/98, 27 April 1999

—P—

*Poklykayew v. Poland**, no. 1103/16, 22 June 2023
Prokopovitch v. Russia, no. 58255/00, ECHR 2004–XI (extracts)

—R—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no. 37685/10, 20 March 2018

—S—

S.C. v. Romania, no. 9356/11, 10 February 2015
S.L. v Romania (dzc.), no 52693/12, 29 November 2022
S.T. v. France, Commission decision, application no. 20649/92, 8 February 1993
Saeed v. Denmark (dec.), no. 53/12 24 June 2014
Sejdovic and Sulejmanovic v. Italy (dec.), no 57575/00, 14 March 2002
Sharma v. Latvia, no. 28026/05, 24 March 2016
Sheveli and Shengelaya v. Azerbaijan, no. 42730/11, 5 November 2020
Söderman v. Sweden [GC], no. 5786/08, ECHR 2013
Sulejmanovic and Sultanovic v. Italy (dec.), no. 57574/00, 14 March 2002
Sultani v. France, no. 45223/05, ECHR 2007–IV (extracts)

—T—

T.A. v. Sweden, Commission decision, application no. 23211/94, 5 July 1994
Takush v. Greece, no. 2853/09, 17 January 2012

—U—

Unlu v. Switzerland, Commission decision, application no. 26584/95, 15 May 1996

—V—

Voulfovitch and Oulianova v. Sweden, Commission decision, application no. 19373/92,
13 January 1993

—Y—

Yildirim v. Romania (dec.), no. 21186/02, 20 September 2007